

자율주행자동차, 정부가 직접 성능 인증 나선다

- 3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59개 법령 시행

3월부터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고, 청소년인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이 확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3월에 총 5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자동차 성능인증 제도 및 적합성 승인 제도 도입(「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20.)

3월 20일부터는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안전성 등 성능을 정부가 직접 인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레벨4와 레벨5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는 판매, 운행이 제한된다. 자율주행기술의 단계에서 레벨5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전 구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고, 레벨4는 무인 택시 운행이 가능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을 말한다. 법령이 시행되면 자동차제작사는 성능인증을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 구매자는 적합성 승인을 받아 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업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고용 지원 확대(「한부모가족지원법」, 3. 4.)

3월 4일부터 청소년인 한부모가 원하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

원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비 지원이나, 검정고시 지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교육 지원 제도 중 한 가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아동 개개인의 진로 희망 분야와 적성, 능력,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도록 바뀌는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 강화된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분할 지급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3. 21.)

3월 21일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한편,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가해자의 지급능력을 조사하기 위해 가해자의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 신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20.)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 도입된다. 이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을 둘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확대한다. 안전책임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초기대응 및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등을 담당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관련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대변인실	책임자	대변인	안은경 (044-200-6511)
		담당자	사무관	조예진 (044-200-651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붙임] 2025년 3월 시행법령 목록(2025. 2. 25.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124호	대법원	3. 1.
2	민사소송법	법률	제20003호	법무부	3. 1.
3	민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3191호	법원행정처	3. 1.
4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04호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3. 1.
5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35호	고용노동부	3. 1.
6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288호	교육부, 행정안전부	3. 1.
7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51호	교육부	3. 1.
8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5289호	교육부, 행정안전부	3. 1.
9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50호	교육부	3. 1.
10	국립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35282호	교육부	3. 1.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05호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3. 1.
12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57호	국토교통부	3. 1.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62호	국토교통부, 법무부	3. 1.
1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61호	국토교통부, 법무부	3. 1.
15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08호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3. 1.
16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98호	중소벤처기업부	3. 1.
1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40호	국가유산청	3. 1.
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75호	국가유산청	3. 1.
19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028호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3. 1.
2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06호	해양수산부	3. 1.
2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교육부령	제278호	교육부	3. 1.
2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45호	교육부	3. 1.
2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204호	교육부	3. 1.
2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44호	교육부	3. 1.
25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20548호	여성가족부	3. 4.
26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제35051호	경찰청	3. 11.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2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57호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11.
28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 13.
2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724호	국토교통부	3. 15.
30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9980호	국토교통부	3. 15.
31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20176호	국토교통부	3. 15.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083호	국토교통부	3. 18.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78호	금융위원회	3. 19.
34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제20399호	인사혁신처	3. 20.
35	도로교통법	법률	제20375호	경찰청	3. 20.
3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91호	국토교통부	3. 20.
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20376호	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3. 20.
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92호	보건복지부	3. 20.
39	광업법	법률	제20439호	산업통상자원부	3. 21.
40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96호	해양수산부	3. 21.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20446호	보건복지부	3. 21.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089호	보건복지부	3. 21.
43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20440호	산업통상자원부	3. 21.
4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1호	특허청	3. 21.
45	범죄피해자 보호법	법률	제20433호	법무부	3. 21.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74호	통일부	3. 21.
4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42호	산업통상자원부	3. 21.
4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456호	금융위원회	3. 21.
49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20444호	산업통상자원부	3. 21.
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0455호	중소벤처기업부	3. 21.
51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20450호	환경부	3. 21.
52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02호	해양수산부	3. 21.
53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204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27.
54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426호	국토교통부	3. 27.
5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311호	환경부	3. 29.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1호	금융위원회	3. 31.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342호	금융위원회	3. 31.
5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5327호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3. 31.
5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723호	해양경찰청	3. 31.